

신고 포상금 확대, 인력·예산 확충 등 내실 있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10.17. 머니투데이는 「기획예산처 보조금 신고센터 환수 '0원'…인력·예산 없는 '유명무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기획예산처 ‘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’ 환수 실적이 4월 센터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”고 하면서,
 - “신고센터 별도 예산과 전담 인력도 없고, 관련 홍보도 제한적인 수준”이며, “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심의하기 위해 5월 신설된 ‘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’도 올해 한 차례만 개최되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- ① 기획예산처는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(‘26.3.10)」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4월 1일부터 온·오프라인*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」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(온라인) 보조금통합포털(<https://www.bojo.go.kr>) 내 ‘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보’ 메뉴 신설 → 신고자가 직접 입력·신고

(오프라인)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(1670-9595) 활용 → 보조금 통합포털 활용 안내 또는 대리신고 접수

-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확인 및 정보 분석, 관련 부처 검토,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친후 부정수급 심사소위원회*, 보조금관리위원회(위원장: 기획처 차관)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, 제재 수준, 신고 포상금 규모 등이 결정**됩니다.

- * 부정수급 적발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의 후속조치 심사(부정수급 여부, 제재 수준 등)
→ 부정수급 적발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기존대로 각 부처 「부정수급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하되, 분기별로 부처 심의결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「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」 재상정
- ** 현재까지(9월말 기준)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신고 건은 아직 없음

②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부정수급 심사를 위해,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9월 말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- 올해 10월 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 결과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적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부정수급 여부, 제재 수준 등에 대한 심사*가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.
- * 부정수급소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부처에 결과 통보

③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확대*(8.25)하였으며,

- * (기존) 반환명령금의 30% →
(개정) 모든 국고환수액(반환명령금, 제재부가금, 가산금)의 30%
- 내년부터는 신고 포상금 예산* 확보 및 인력** 확충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.
- * '27년 예산안에 98억원의 신고포상금 예산 반영(공익신고장려기금)
- ** (기획처) 국고보조금관리단 신설(7.14) / (재정정보원) '27년 예산안 확정 후 인력 확충 계획
- 내년에는 홍보예산('27년 정부안에 1억원 반영)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.

④ 정부는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」를 강력한 감시망으로 자리 매김 함으로써,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국고보조금관리단	책임자	과 장	이원경 (044-214-3510)
	국고보조금총괄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병철 (bckim8123@korea.kr)
	국고보조금관리단	책임자	과 장	정성구 (ninestars9@korea.kr)
	국고보조금점검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이해인 (044-214-3530)
			사무관	박준수 (prkjns01@korea.kr)